

“무리한 자료 요구” “정당한 의정 활동”...복구의회 갑질 논란

사무국 “의원 6명이 비슷한 내용 서식만 바꿔 자료 요구 명백한 갑질” 의원들 “갑질신고로 명예 추락...의정활동 왜곡 안돼” 공식 사과 요구

광주시복구의회가 의원들의 ‘갑질 행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무더기 분회의 참고 자료 요청을 갑질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나선 반면,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나 업무 지시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확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광주시복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 복구의원 6명은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의회사무국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상식적인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의회사무국 직장 협의회(직협)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복구의원 8명이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의회 사무국 등에 참고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작했다.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집행부 총 69개 부서 227개 항목, 의회 사무국 6개 부서에 21개 항목이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 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추진비 현황 등이 포함됐다.

복구 사무국 직원들은 이를 두고 “6명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서식만 바꿔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명백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광주 복구의회 갑질 신고센터에 6명의 의원을 신고했다.

이들이 공식대응에 나선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자료 요구는 공식 회의나 지방의회 사무국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돼야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이지만 그동안 의정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묵인돼 왔던 관습이 더 이상은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자료 요구”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맞섰다.

의회사무국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조사결과가 지연돼 논란이 이어지자 광주 복구의회 사무국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센터에 접수된 갑질신고를 국민권익위에 이첩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협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복구의회 의장과 의회 사무국장은 갑질 피해 신고 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상급기관으로 이첩하고 의도적인 조사 지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직협은 2020년 기대서 의원 수의계약 사태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복구의회가 ‘갑질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회사무국 갑질 피해 신고센터는 사안 검토 결과 ‘갑질 해당 없음’으로 각하 처리했다.

이에 의원들은 “신고인들의 권리 보장과 2, 3차 피해를 염려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이번 갑질 신고 등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으며 복구의회의 위상과 명예가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왜곡하거나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의회사무국 갑질 신고센터의 최종 결과대로 갑질 의혹이 해소된 만큼 직협의 피신고인 의원 6명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기념사진.

박병규 광산구청장,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수상

자치행정 부문 혁신정책상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자치행정 부문 혁신정책상을 수상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 청장은 시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세운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대상 혁신정책상을 받았다.

민주연구원 이주희 대표(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제 30주년을 기념해 제정됐다.

박 청장은 민선 8기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정 구청장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각종 위원회 회의의 실시간 공개’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인 혁신 사례로 꼽혀 자치행정 부문 혁신정책상의 영예를 안았다.

‘찾아가는 경정 구청장실’은 현장, 시민에게서 답을 찾은 광산구의 대표적 시민 소통 창구로 박 청장이 직접 일상 현장에 ‘구청장실’을 열어 시민으로부터 생활 불편, 건의 사항, 정책 제안 등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등으로 창구를 다양화하며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먼저 찾아가 시민 목소리를 듣는 체계를 확립했다.

찾아가는 경정 구청장실은 지난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94%의 높은 만족도(2024년 10월 24일~31일 2851명 조사)로 나타났고,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만족도도 91%에 달했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실시간 공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자 2023년 9월부터 비공개로 운영하던 각종 위원회를 공개로 전환했다. ‘광산LIVE(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광산구는 위원회 공개를 위해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회의실을 3개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청사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도 온라인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장비를 보급하는 등 기반 환경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 8기 광산구는 오로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혁신해 왔다”며 “계속해서 경정과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동구 장애인화가게’ 발굴 카페 등 2119곳 대상 전수 조사

광주시 동구는 ‘2025년 동구 장애인화가게’를 발굴한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함께 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3월 21일까지 동구 내 음식점과 카페 등 211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는 동구 13개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 협의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세부 기준은 출입로 턱 2cm 이하, 문 폭 80cm 이상, 내부 턱 2cm 이하, 휠체어 탑승 상태로 이용 가능한 테이블 유무, 테이블 아래 허부공간 45cm 이상, 화장실 턱 2cm 이하, 화장실 문 폭 80cm 이상, 화장실 안전 손잡이 유무 등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장애인화가게로 선정된다. 선정된 업소에는 향후 협판 제작,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장애인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모든 주민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이 더욱 자유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세심한 복지정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서구, 포트홀 신속 복구... ‘응급 정비반’ 가동

안전사고·차량 파손 최소화... 훼손된 도로시설물 즉시 보수

광주시 서구가 포트홀(도로파임) 응급정비반을 가동한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동절기 잦은 폭설과 강우 등으로 발생한 포트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월 15일까지 한 달간 응급 정비반을 운영한다.

서구는 해빙기를 앞두고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 및 차량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 정비반을 3개조 7명으로 구성했다. 응급 정비반은 도로 내 포트홀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등 도로시설물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또 포트홀 발생이 잦고 많은 구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트홀로 인한 불편신고는 서구 건설과 또는 안전신문고, 문자하랑게등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이승구 서구 건설과장은 “포트홀은 차량의 주행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유발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서구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소상공인 부담 완화... 광산구,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광주시 광산구가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고물가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검토중이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및 민간 사업자 등이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

물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다.

광산구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결정될 경우 올해 4771건에 대해 약 9억여원을 감면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